

[첨부자료1] 진행경과

2016. 4. 8. 종업원들의 탈북 및 입국,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된 사실이 통일부 브리핑을 통해 알려짐. 탈북 경위를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고, 외부와 완전히 접촉이 차단된 상태에서 가족들은 종업원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2016. 5. 16. 대리인단의 접견신청. 국정원의 거부. 이후 5-6월에 거쳐 접견신청을 계속하였으나 모두 거부당함. 각 거부처분에 대한 준항고 제기(기각되어 항고심 계류 중)

2016. 5. 24.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제기.

2016. 6. 13.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긴급청원 제출(종업원들의 변호인 접견권 요구/ 11월 심의 진행, 결과 기다리고 있음)

2016. 6. 21. 심문기일 진행. 담당판사에 대한 기피신청

2016. 6. 24. 국가정보원장 고발(직권남용 혐의)

2016. 7. 13.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제기(수용의 위법성 관련)

2016. 7. 22. 기피신청 기각결정

2016. 8. 12. 각 접견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1심 진행 중)

2016. 8. 24. 유엔 인권이사회의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 ‘인권 옹호자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기(변호사들의 권리침해 문제제기)

2016. 9. 9. 인신구제청구 각하결정(가족관계 및 위임관계 확인되지 않았고, 이미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나왔으므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 -> 즉시항고 제기

2016. 11. 3. 즉시항고 기각결정(가족관계 및 위임관계는 확인되었으나, 청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 -> 재항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

2017. 1. 19.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개인진정 제기